

##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이 글은 핵무기와 핵 억제, 핵 위협과 핵 확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북한 핵 담론의 ‘원형’을, 핵무기 금지 담론이 등장하는 1947년부터 1964년 10월 핵 확산을 긍정하는 계기가 되는 중국의 첫 핵실험까지의 기간에서 추출하고자 한다. 이 기간 북한 핵 담론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등장했다. 즉 이 글은 1947년부터 1964년까지 형성되는 북한 핵 담론의 모순과 역설 그리고 핵 억제 및 핵 확산을 인정하는 심리적 전환의 계기가 배태되는 과정에 대한 서술이다. 핵 담론의 심리학에 대한 이론과 방법을 토대로, 미국의 핵 독점에서 소련의 핵실험을 거쳐 중국의 핵실험이 이루어지는 단계별로, 북한의 핵 담론을 관찰하고 북한 핵 담론의 ‘마음체계’를 도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주제어: 북한, 소련, 중국, 미국, 핵 담론, 핵무기, 핵실험, 핵 위협, 마음 체계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NRF-2011-330-B00138). 그리고 이 연구는 2014학년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도 이루어졌다.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1. 문제 설정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그리고 2006년 10월, 2009년 5월, 2013년 2월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 말하면서도, 북한식 표현에 따르면 핵무기 보유의 “부득불 장기화”에서 “영구화”의 길을 가고 있다. 2012년 4월 “사회주의헌법의 수정보충”을 통해 전문에 김정일의 업적으로 “핵보유국”을 명문화했다. 2013년 3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하는 노선을 선택했고, 4월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면서 국내법으로도 핵 보유를 영구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어디까지나 자위적핵억제력”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핵 국가의 핵 위협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비핵 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으며 핵 확산을 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비핵화의 조건은 세계의 비핵화로 상승된 상태다. 그러나 북한의 핵 억제력은 타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 핵 운반체 실험, 핵탄두의 소령화와 경량화와 같은 핵 ‘능력’의 강화와 핵과 관련하여 단호한 듯한 ‘결의’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핵 억제력 확보를 위한 인정 투쟁을 하고 있다.<sup>1)</sup>

북한의 핵무기 담론은 규칙의 측면에서 모순적 요소들의 구성물이다. 비핵화와 핵 보유의 영구화가 충돌하고, 핵 폐기를 위한 핵 보유는 역설이다. 핵 위협에 스스로의 핵 억제력으로 맞서는 것은, 2002년

---

1) 구갑우, “북한의 핵억제담론의 심리학,” 『한반도 포커스』, 26호(2013년 11·12월호).

10월 미국이 고농축우라늄에 의한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을 제기한 후 제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고,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을 탈퇴할 때까지,<sup>2)</sup> 북한의 공식 담론이 아니었다. NPT 탈퇴를 밝힌 최고 수준의 대외적 입장 표명인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자신들의 “핵활동은 오직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목적에 국한될것”이라 말한 바 있다.<sup>3)</sup> 따라서 북한의 핵 보유는 정세적 대응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의 ‘심리적 전환’을 생각하게 한다.

이 글은 핵무기와 핵 억제, 핵 위협과 핵 확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북한 핵 담론의 ‘원형’을, 핵무기 금지 담론이 등장하는 1947년부터 1964년 10월 핵 확산을 긍정하는 계기가 되는 중국의 첫 핵실험까지의 기간에서 추출하고자 한다. 이 기간에 북한 핵 담론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등장했다. 즉 이 글은 1947년부터 1964년까지에 형성되는 북한 핵 담론의 모순과 역설 그리고 핵 억제

2) 북한은 NPT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 번역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조선중앙년감 주체93(2004)』(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04), 581~582쪽.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식 띄어쓰기의 독특성이 있다. 불완전명사를 앞 단어에 붙여 쓰고 있다. 북한의 “띄어쓰기”에도 근본적 전환이 있었다. 1954년에 간행된 『조선어 철자법』(평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에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 띄어 쓸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에 출간된 『조선문화어건설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붙여 쓰고 있다. 대중용 띄어쓰기 지침은 북한의 대중잡지인 『천리마』에 게재된다. 예를 들어, 『천리마』 2000년 6~7, 8호에 게재된 “새로 규정한 우리 글의 띄어쓰기” 참조. 북한식 띄어쓰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는 구갑우, “정치에 전범을 제시한 어느 출판사의 편집 매뉴얼,” 『교수신문』, 2012년 5월 7일. 이 글에서는 북한 문헌의 경우 가능한 한 출간 당시의 띄어쓰기를 사용한다. 따라서 같은 표현이 다른 띄어쓰기를 가질 수 있다. 두 따옴표에 들어 있는 인용문은 대부분 북한의 글들이다. 이 원칙은 국내외 문헌에도 적용된다.

및 핵 확산을 인정하는 심리적 전환의 계기가 배태되는 과정에 대한 서술이다. 핵 담론의 심리학에 대한 이론과 방법을 토대로, 미국의 핵 독점에서 소련의 핵실험을 거쳐 중국의 핵실험이 이루어지는 단계별로, 북한의 핵 담론을 관찰하고 북한 핵 담론의 ‘마음체계’를 도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 2. 핵 담론의 심리학: 이론과 방법

### 1) 이론

핵무기의 출현이 국제정치에 미친 결과는 체제 전복적이었다.<sup>4)</sup> 핵무기의 파괴력은 핵 국가(nuclear weapon state)가 비핵 국가의 심리와 행동을 통제하는 권력을 가지게 했다. 미국의 핵 독점체제에서 1949년 8월 소련의 핵실험 이후 핵 복점체제(複占体制)로 이행한 후에는,<sup>5)</sup> 핵 국가들의 관계에서 공멸(共滅)의 핵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핵 억제(nuclear deterrence)’의 개념이 등장했다. 핵무기는 한편으로 ‘매력(attraction)’

---

4) 박건영, “핵무기와 국제정치: 역사, 이론, 정책 그리고 미래,” 『핵의 국제정치』(서울: 경남대학교출판부, 2012), 12쪽.

5) 미국은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주에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핵실험을 했다. 그리고 1945년 8월 6일 ‘우라늄’ 원자폭탄을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했다. 이 원자폭탄의 이름은 ‘작은 소년(Little Boy)’이었다. 1945년 8월 9일 일본의 나가사키에 투하한 ‘플루토늄’ 원자폭탄의 이름은 ‘뚱보(Fat Man)’였다. 첫 번째 핵실험에서 사용된 원자폭탄과 같은 종류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다. 미국은 대량살상 무기인 두 종류의 핵무기의 폭발 여부를 민간인 밀집지역에서 시험한 셈이다. 1952년 10월 영국이 원자폭탄 실험을 하면서 핵 과점체제가 형성되었다. 프랑스는 1960년 2월 핵실험을 했다.

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포(revulsion)’이기 때문이다.<sup>6)</sup> 즉 핵 복점과 핵 과점체제의 국제정치에서는 핵 국가 대 비핵 국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핵 국가들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이 두 관계들의 내용과 형태는 핵 능력보다는 ‘핵 심리(nuclear psychology)’에 의해 결정된다.<sup>7)</sup> 서로를 적으로 또는 친구로 규정하는 정체성(identity)의 정치에 따라, 핵무기의 숫자와 같은 핵 능력이 관계를 결정하는 변수가 아닐 수 있다. 적의 핵무기가 공포라면 친구의 핵무기는 매력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들을 도식화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핵무기를 매개로 한 국제관계

정체성	국제관계	핵 국가들의 관계	핵 국가와 비핵 국가의 관계
	친구	핵 협력	핵 우산
적	핵 갈등과 핵 억제	핵 위협과 핵 개발핵 확산	

핵 협력은 핵과 관련하여 국가 정책의 상호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국은 미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에 참여했지만, 미국은 핵실험 성공 이후 영국에 핵 기술을 이전하지 않았다. 영국은 독자적으로 핵실험을 하고 미국이 소련에 맞서기 위해 영국에 협력하자 1958년부터 미국과 공동으로 핵실험을 했다.

억제란, 일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보복

6) D. Barash and C. Webel, *Peace and Conflict Studies*(London: Sage, 2002), p. 140.

7) 국제 구조를 결정하는 변수로 능력보다 관념에 주목하는 구성주의적(constructionist) 사고다. 대표적으로 A.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이나 처벌을 가하겠다는 조건부 약속이다. 국제정치에서 상대방의 군사적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억제는,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군사적 능력에 기초한다. 억제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위협을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sup>8)</sup> 즉 억제는 상대방의 인정을 포함하는 소통과 약속의 협력 게임이다. 핵 억제는, 핵 경쟁과 핵 갈등이 야기하는 안보 불안, 즉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를 탈출하는 한 방법이다. 핵무기에 의한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에 대한 인식 공유라 할 수 있는 냉전시대 미소의 공포 균형은 핵 억제가 만들어진 대표적 사례다.<sup>9)</sup>

핵 위협은 비핵 국가가 핵 국가와 적대관계일 때 느끼는 심리적 상태다. 핵 위협을 느낄 때 어떤 국가의 선택은 핵 개발일 수 있다. 그러나 핵 개발은 의지뿐만 아니라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국제적 압력 때문에 핵 개발이 저지될 수도 있다. 군사적 방법에 의한 방위를 지속하고자 한다면, 핵무기의 대체물로 방위력을 강화하거나 친구가 될 수 있는 핵 국가를 찾아야 한다. 핵 국가와 비핵 국가가 친구라면, 핵 국가는 비핵 국가에게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련의 공격을 억제하고 비동맹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1945~1968년 사이에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던 스웨덴이 핵 포기과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교환했던 것처럼,<sup>10)</sup> 비핵 국가의 경우 핵 개

---

8) P. Morgan, *Deterrence Now*(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9) 한 번의 공격으로도 대량살상을 가능하게 하는 핵무기의 등장으로, 방위(defence)에 기초한 거부(denial)와 핵무기를 사용한 처벌(punishment)에 의한 억제가 구분되면서, 방위와 억제는 서로 ‘대체 가능한’ 선택이 되었다. G. Snyder, *Deterrence by Denial and Punishment*(Princeton: Woodrow Wilson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Princeton University, 1959).

10) T. Jonter, “Swedish Plans to Acquire Nuclear Weapons, 1945~1968: An Analysis of the Technical Preparations,” *Science and Global Security*, Vol. 18(2010); P. Cole,

발의 대체물로 핵우산을 통해 핵 위협을 해소하고자 한다. 핵우산은 핵 국가가 친구인 비핵 국가에 대한 위협이나 공격을 예방하고자 하는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의 한 형태다. NPT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 국가가 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은 핵우산이 아니라 핵 개발을 선택한 국가들이다.

이 네 관계 형태가 국제 구조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들, 친구와 적을 가르는 정체성의 정치에 의해 결정된다면,<sup>11)</sup> 정체성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생각해야 한다. 즉 국가들의 정체성의 표현인 ‘다른’ 선택과 행동 — 예를 들어 핵 국가 또는 비핵 국가 되기 — 의 원인에 대한 고려다. 국가들이 무정부관 구조하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질적 행위자가 아니라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 다른 마음체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이론의 도입이다.<sup>12)</sup> 즉 국가를 의인화(擬人化)할 수 있다면 그 의인의 현실태인 정책 결정자들의 심리적 요인들의 인과 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집합 심리의 구조화된 질서를 ‘마음체계’로 정의하고 그것이 국제적 행동으로 현상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마음에 대한 소박한

---

“Atomic Bombast: Nuclear Weapon Decision-Making in Sweden, 1946-1972,”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0, No. 2(1997).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도 핵 개발을 한 사례다. K. P. O’Reilly, “Leaders’ Perceptions and Nuclear Proliferation: A Political Psychology Approach to Proliferation,” *Political Psychology*, Vol. 33, No. 6(2012).

11) K. Woodward, *Understanding Identity*(London: Arnold, 2002).

12) 동질화 가정은 K.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Reading: Addison-Wesley, 1979); 심리학적 접근은, J. Mercer, *Reputation & International Politics*(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은용수, “심리/인지적 연구와 국제관계학,” 『국제정치논총』, 제53집 4호(2013).

해석은 마음을 인지(cognition)와 동일시하여, “지, 정, 의를 모두 포괄하는 능동적인 심적 활동”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인지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며, 이해하고, 사용하는 과정이라 할 때, 마음은 ‘정보처리체계(information processing system)’일 수 있다. 이 정의에 기초하여 우리는 마음체계를, “주체를 만들어내는 담론적 혹은 비담론적 요소들의 네트워크”로 보려 한다.<sup>13)</sup>

핵 과점체제의 국제정치에서 주체를 호명하는 마음체계는 정의상 상호적이다. 타자라는 현 존재가 주체의 마음체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역으로 자신의 마음체계는 타자를 주체화한다. 한 국가의 성격은 그 국가의 핵 담론을 결정하는 요인지만, 다른 한편 상대 국가도 그 국가의 성격을 고려하며 핵 담론을 생산한다. 그러나 서로를 보는 시각은 다르다. 적으로 간주하는 세력이 기대와 달리 긍정적 행동을 할 때는 ‘정세(situation)’를 그 행동의 원인으로, 그 반대로 기대한 것처럼 부정적 행동을 할 때는 ‘성향(disposition)’ 때문이라 생각하는

---

13) 마음과 인지의 동일시는 신현정 외, 『마음학: 과학적 설명+철학적 성찰』(서울: 백산서당, 2010). 정보처리체계는 G. Butler and F. McManus, *Psychology: A Very Short Introduction*(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마음체계의 정의는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파주: 문학동네, 2009). 『마음의 사회학』에서는 마음·체계(system)’가 아니라 마음·레짐(regime)’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특정한 정치·경제적 국면’에서 구조화되어 주체를 형성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레짐을 차용했을 것이다. 국제관계학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분명하게 정의된 이슈 영역(issue area) 안에서 작동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규칙, 기대, 처방의 틀을 ‘국제레짐’으로 정의하고 있다. S. Krasner(ed.), *International Regimes*(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이 글에서 레짐 대신에 체계란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구조화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주체들의 마음의 통합을 향한 공통의 필요와 행동을 담기 위해서다. 국제관계학에서 마음체계 개념의 도입은 합리적 선택 이론이 구조의 담지자 내지는 단위(unit)로 명명하는 행위자를 “개성 있는 ‘주체’”로 복원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도중윤, “국제정치학에서 주체 물음: 해석학적 접근을 위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제53집 4호(2013).

경향이 있다.<sup>14)</sup> 친구에게는 정반대로 원인을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도 적이나 친구냐에 따라 핵 개발의 전 단계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다.

행위자의 위치도 서로 다른 마음체계를 작동하게 한다. 예를 들어, 핵 억제를 부과하려는 행위자는 객관적 세계에 대한 반작용, 즉 정세 때문이라 자신의 행동을 해석하지만 관찰자는 그 행위자의 성향에서 행동의 원인을 도출하려 한다.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적을 친구로 만들어야 할 때는 상대 국가의 성향에서 행동의 원인을 찾지 않고 정세의 변화를 언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인도, 미국과 파키스탄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정세의 변화로 상호 이익과 상호 주관성이 형성되어 두 국가를 사실상의 핵 국가로 인정하기도 한다. 즉 정세와 성향 가운데 무엇을 원인으로 보느냐에 따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정세는 변수지만 성향은 상수이기 때문이다.<sup>15)</sup> 심리학적 접근은 행동의 원인을 성향으로 귀결시키는 합리적 선택 이론과 달리 성향과 정세 두 가지 다룰 고려한다.

## 2) 방법

심리적 접근을 도입할 때, 정책 결정자의 마음체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마음체계의 측정을 위해, 정책 결정자들의 핵

---

14) 정세와 성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J. Mercer, *Reputation & International Politics*. 바이오폴리틱스(biopolitics)에서도 상대방을 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상대 이득(relative gains)이 중요하지만, 친구로 인식할 경우 절대 이득(absolute gains)에 따라 행동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김세균·이상신, “권력의 DNA: 정치행태의 생리적 접근,” 『평화연구』, 제21권 2호(2013).

15) J. Mercer, *Reputation & International Politics*.

심적 정치신념 — 철학적 신념과 도구적 신념 — 을 계량화하는 ‘조작적 코드(operational code)’가 사용되곤 한다. 예를 들어 정치 지도자가 생산하는 텍스트에서 ‘동사(verbs)’를 추출하여 마음체계가 협력적인가 또는 갈등적인가를 보여주려 한다.<sup>16)</sup> 그러나 이 방법을 통해 정책 결정자들의 마음체계가 담론과 행동의 원인임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심리적 접근에서 생물학에 의존하려는 이유도 이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정치 행태를 설명하기 위해 진화심리학, 뇌신경의학, 내분비학, 생리학, 형질인류학 등이 동원되고 있고,<sup>17)</sup> 유전자 환원론의 성격을 지니는 이 생물학적 정치학의 철학적 기초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는 일원론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제한적이지만 북한 핵 담론의 관찰과 분석을 통해 정책 결정자들의 마음체계를 읽고자 한다. 마음체계가 생산하는 담론과 사실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마음체계를 해석한다. 해석의 기초는 텍스트(text)다. 텍스트는 행동(action)을 포함하지만 이 글에서 주요한 초점은 글과 말로 생산된 텍스트다. 텍스트를 국제적 맥락(context) 속에서 읽으며 텍스트의 논리와 모순 그리고 실제 행동과의 괴리를 찾는 작업이다. 역사적 구조에 관한 담론과 담론의 텍스트는 의미론적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텍스트 해석은, 사람들이 특정한 시공간에 건설하는 인간 조건과 의미에 관해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다.<sup>18)</sup>

---

16) 은용수, “심리·인지적 연구와 국제관계학.” 인지적 신념과 의사결정의 행태를 조작적 코드를 통해 측정하려는 고전적 연구로는 A. George, “The Causal Nexus between Cognitive Beliefs and Decision-making Behavior: The ‘Operational Code’ Belief System,” in L. Falkowski(ed.), *Psychological Models in International Politics* (Boulder: Westview Press, 1979).

17) 김세균·이상신, “권력의 DNA.”

18) K. Rogers, *Toward a Postpositivist World*(New York: Peter Lang, 1996).

이 의미가 행동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 의미는 행동과 괴리될 수 있다.

주요한 텍스트는 핵 담론과 관련하여 북한의 정부기관들이 발표한 문건들 — 예를 들어 성명, 비망록, 담화 등등 — 과 북한을 “령도”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기관잡지인 『근로자』와 북한의 한 해를 결산하는 『조선중앙년감』의 기사와 논문, 그리고 조선로동당이 출간한 사전류와 ‘소설’이다. 이 텍스트들은, 언표들(statements)의 집합이자 이 언표들을 생산하는 규칙들이 존재하는 담론의 구성 요소다. 북한의 소설도 ‘사상교양의 기능’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감성’에 의존하는 담론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다.<sup>19)</sup> 담론의 구성 요소인 이 규칙들은 언표들 외부의 조건인 정치적·사회적 맥락, 즉 권력의 작용과 관련되어 있다.<sup>20)</sup> 북한의 담론도 차이와 배제를 담지하며

---

19) 북한의 문학은 이른바 “주체사실주의”에 기초해 있다. “사회주의문학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전일체를 이루고 있는 수령, 당, 대중의 호상관계를 잘 그려야 한다. 문학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기위하여서는 정치사상교양적기능, 생활인식적기능, 문화정서교양적기능을 높여야 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상교양의 기능이다.” 김정일, 『주체문학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마음체계를 구성하는 지, 정, 의 가운데, 감성체계에 주목하여, 북한예술작품에서 나타나는 ‘붉은’, ‘위대한’, ‘들끓다’, ‘미적이다’, ‘خم호하다’ 등과 같은 ‘감성어휘’ 분석의 방법을 제시하는 시론적 연구로는 김정수, “북한의 감성체계 분석을 위한 방법론 모색,” 『2014년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0) 미셸 푸코(M. Foucault), 『담론의 질서』, 이정우 옮김(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1998); 구갑우, 『국제관계학 비판: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평화』(서울: 후마니타스, 2008), 15장. 인간의 사고가 언어로 완전히 표현될 수는 없지만, 언어야말로 인간의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물이다. 의식은 단어 속에 자신을 표현한다는 언명은 사고와 언어의 한 관계에 대한 진술이다. 담론의 구성물인 언어는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외적 언어와 자기중심적인 내적 언어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소통을 위한 외적 언어는 행위자의 ‘동기’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레프 비고츠키(Lev Semenovich Vygotsky), 『사고와 언어』, 이병훈·이재혁·허승철 옮김(과주: 한길사, 2013).

타자를 생산한다. 따라서 핵 담론 속에서 갈등과 협력의 언표들을 발견할 수 있다.

담론(discourse)을 ‘담화(談話)’로 번역하는 북한도 담화를, “사업설정이나 형편을 료해하고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사람들을 발동시키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의 기본형식이며 효과적인 교양방법”으로, 또한 “일정한 문제에 대한 견해나 태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sup>21)</sup> 즉 북한의 담론도 자신의 정체성과 이익에 부합하는 나름의 정치 질서를 구성하려는 ‘수행적(performative) 담론’의 성격을 가진다.<sup>22)</sup> 이와 더불어 우리는 수행적 담론의 한 형태지만, 사후적으로 어떤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당화 담론’에도 주목한다. 단, 북한의 담론에서 마음체계 읽기를 시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북한이 “집단활동의 심리적 특성”을 “협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3)</sup> 그러나 이 규정성은 이른바 사회주의적 특성을 가진 국가 ‘안’의 집단으로 한정된다. 북한은 국가 ‘밖’의 일인 외교 정책을 “국가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대내정책의 연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sup>24)</sup> 핵 담론 속의 대상인 상대국의 성격에 따라 담론의 내용에서 ‘선협적으로’ 협력 또는 갈등이 전제될 수 있다.

---

21)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22) D. Campbell, *Writing Security: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2).

23) “단결과 협력이 사람들의 생존방식이다. 사람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은 사람들이 단결과 협력관계를 맺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형성발전되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처음부터 단결하고 협력하는 방법으로 자기운명을 개척했다.” 리재순, 『심리학개론』(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8).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 3. 미국의 핵 독점과 북한의 핵무기 담론: ‘핵무기 금지’

미국은 두 번의 핵폭탄 투하를 통해 핵무기의 ‘파괴력’과 핵무기 사용 ‘의지’를 시현했다. 그리고 핵 독점을 통해 동북아에서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고자 했다.<sup>25)</sup> 미국의 핵 독점체제하에서 “위대한 소련의 무력에 의하여 해방된” 북한의 핵무기 담론의 최초 형태는 원자무기의 ‘금지’였다.<sup>26)</sup> 1947년 3월 13일 『로동신문』에는 “원자무기금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가 8월 24일에는 “누구가 원자무기의 금지를 반대하느냐” 등의 기사가 실린 바 있다. 원자폭탄을 금지하는 문제의 토의를 미국과 영국이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1949년 2월 24일 『로동신문』에 게재되었다. 이를 뒤인 2월 24일에는 소련이 “군비축소와 원자무기금지를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있다”는 기사도 볼 수 있다.

북한의 이 핵무기 담론은 소련 공산당이 주요 역할을 했던 평화운동과의 연관 속에서 국내 정치적 계기를 가지게 된다. 1947년경 소련 공산당의 주도로 만들어진 공산당들의 국제사무국인 코민포름(Communist Information Bureau: Cominform)은 세계를 소련이 주도하는 평화 세력 대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 세력으로 구분한 후 세계적 수준에서 ‘평화운동’을 조직하기 시작했다.<sup>27)</sup> 그러나 이 평화운동은 “실질적으로 무당

---

25) 박건영, “핵무기와 국제정치,” 12쪽.

26) ‘1958년’에 사용된 표현이다. 김희중, “미제의 침략에 의한 남조선의 참상,” 『근로자』, 제3호(1958.3.1). 소련도, “소련의 무력이 일본의 식민적 억압으로부터 한반도를 해방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I. D. Ovsyany et al., *A Study of Soviet Foreign Policy*(Moscow: Progress Publishers, 1975), p. 68. ‘1956년’ 중소의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인 이른바 ‘8월중파투쟁’ 이후 북한 문헌에서 ‘위대한 소련’이란 표현은 감소했다. 정성임, “북·러 관계,” 『북한의 대외관계』(파주: 한울, 2007), 303쪽.

파적 민주 운동”이었고, ‘반핵’을 매개로 최대공약수를 찾아낸 대중운동으로 평가되기도 한다.<sup>28)</sup> 1948년 8월 폴란드의 브로츠와브(Wroclaw)에서 ‘평화를 위한 세계지식인대회’가 개최되었고,<sup>29)</sup> 1949년 4월에는 72개국이 참여한 ‘세계평화대회’가 프랑스의 파리(Paris)와 체코의 프라하(Prague)에서 열렸다. 이 평화대회의 핵심 의제는 핵무기 ‘금지(prohibition)’였다.

북한은 국가 수립 후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이었지만, 이 세계평화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1957년’에 간행된 『대중 정치 용어 사전』에는 “평화 옹호 운동”의 항목이 있을 정도다.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현 시기의 가장 위력 있는 인민 대중의 운동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얼마 안 있어 미국과 그를 추종하는 서방 침략 계층은 소련과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 음모를 강화하여 나섰는바 이것은 전쟁의 참화를 체험한 인민들을 불안케 하였다. 1949년에는 서부 열강들이 북대서양 동맹을 조작하여 전쟁의 위협을 증대시켰다.<sup>30)</sup>

27) 소련 공산당이 참여했지만 당시의 평화운동을 무당파적 운동으로 보는 시각은, 청카이(程凱), “평화염원과 정치동원: 1950년의 평화서명운동,”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서울: 문화과학사, 2013); 소련 공산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각은 D. Barash and C. Webel, *Peace and Conflict Studies*, pp.39~40.

28) 청카이(程凱), “평화염원과 정치동원,” 108~111쪽.

29) 화가 피카소(P. Picasso), 핵물리학자 줄리오-퀴리(F. Joliot-Curie), 소설가 헉슬리(A. Huxley)와 같은 유명한 지식인들이 이 대회에 참여했다.

30) 『대중 정치 용어 사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316~317쪽. 1959년에 출간된 『대중 정치 용어 사전(증보판)』, 296~297쪽은 이 구절에서 미국을 “미제국주의자들”로 바꾸고, “서부 열강” 앞에 “미제를 괴수로 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 미국에 대한 표현이 더욱 과격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서구의 구호를 “《반쏘 반공》”으로 묘사하고 있다. 북대서양 동맹도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조성된 ‘정세’ 속에서 평화운동의 출현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운동을 사회주의 진영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현 시기의 평화 옹호 운동의 특징은 《평화는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쟁취하여야 한다》는 구호하에 적극적으로 조직적인 인민 운동으로써 전쟁 방화자들의 음모를 적극적으로 폭로 분쇄하며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고립시키는 데 있다. 이 운동은 처음에 공산당원을 비롯한 진보적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것인데 그 후 사상, 신앙, 민족별을 불문하고 세계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광범히 망라되게 됨으로써 마침내 그의 규모와 조직성에 있어서 일찍이 력사상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력 있는 운동으로 되었다.<sup>31)</sup>

이 해설은 세계평화대회가 공산당과 지식인 중심에서 무당파적 성격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1959년’ 『대중 정치 용어 사전』에는 공산당원을 비롯한 진보적 지식인이 중심이 되

---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란 정식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1957년판 『대중 정치 용어 사전』은 발간의 목적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대중의 일상 생활과 정치 학습에서 제기되는 용어들에 대한 해명을 줌으로써 그들의 학습을 방조하”기 위한 것이라 적고 있다. 98원의 가격이 매겨져 있고, ‘80,000부’가 발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 31) 1959년판 사전에는 “적극적으로”가 “신랄하게”로 바뀌어 있다. 1964년에 출간된 『대중 정치 용어 사전』 3판에는, 평화는 쟁취하여야 한다는 구절이 빠져 있다. 대신 북한에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평화주의”에 이 구절이 들어 있다. “평화주의”는 “제국주의의 존재가 전쟁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호도하며 정의의 전쟁까지도 포함한 온갖 전쟁을 부인한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평화는 전쟁과 마찬가지로 국가 정책, 사회 제도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평화를 얻기 위해 폭력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는다. 북한의 평화에 관한 마음체계의 핵심이 이 들어있다.

었다는 구절이 없다. 평화옹호운동의 무당파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해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세계평화대회의 핵심의 제인 핵무기 금지 또는 반핵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세계평화대회의 참여를 국내적 차원의 대중운동과 연계했다. 1949년 3월 24일로 예정된 ‘평화옹호전국연합대회’를 위해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군중대회를 개최했고, 이 평화옹호전국연합대회에서 소설가이자 당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었던 한설야, 여성계를 대표하여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 위원장을 역임한 박정애, 종교계를 대표하여 기독교민주동맹 위원장을 했던 김창준을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파견할 대표로, 파견했다.<sup>32)</sup> 당시의 세계평화운동을 문화예술인이나 과학자와 같은 지식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대표단 구성으로 보인다. 1949년 6월 9일 『로동신문』에는 평화옹호세계대회에 참여한 북한 대표단이 귀국했다는 보도를 볼 수 있다.

반핵을 기치로 한 세계평화대회에 북한이 참가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정세’와 사회주의국가의 ‘성향’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보여준다. 1949년의 시점에서 북한은 남로당을 대표했던 박헌영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의 대립, 즉 소련 진영 대 미국 진영의 대결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정치’를 읽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진영 대립을 생산하는 ‘외교 정책’을 국가 성격

---

32) 북한의 평화옹호운동과 관련된 선구적 연구는, 정용욱, “냉전의 평화, 분단의 평화: 6·25전쟁 전후 북한의 평화운동에 나타난 평화론,” 『‘평화’의 역사, 역사 속의 평화』(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13년 11월 15일). 미국 국립문서관의 ‘노획북한군문서철’에서 찾은 1949년에 간행된 『평화옹호 세계대회문헌집』과 1950년 3월과 4월에 발간된 평화옹호 산업성 위원회의 『회의록철』이 정용욱 교수 논문의 주요 자료들이다. 이 논문에서 평화옹호운동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의식은 정용욱 교수의 논문에 상당 정도 빛을 지고 있다.

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쏘베트국가의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쏘베트의외교정책의 목적”이란 표현은 북한이 수입한 외교 정책론이라 할 수 있다.<sup>33)</sup> 또한 평화운동의 보편성의 수용과 함께 북한은 평화운동의 한반도적 특수성을 ‘통일’과 연계하는 변용을 하고 있었다. 세계평화대회에서 북한 대표로 연설을 했던 한설야는 귀환보고대회에서, “우리나라에서 평화옹호운동의 당면한 문제는 곧 미군을 철퇴케 하며 반동배들을 처단하여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완성하는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sup>34)</sup> 한반도적 맥락에서 평화운동은 곧 통일운동으로 해석된 셈이다.

---

33) 진영론은 박현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대외정책에관하여,” 『인민』, 2월호(1949); 외교 정책의 목적은, 드·브·레빈, “외교의개념에관한 문제에대하여,” 『인민』, 3월호(1949). 두 글 모두 『북한관계사료집』, 제37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에서 인용.

34) 정용욱, “냉전의 평화, 분단의 평화,” 89~90쪽. 1949년 6월 11일 『로동신문』에 실린 한설야 귀국담의 제목은, “전쟁도발자를 반대하는 전세계 인민들의 단결은 공고하다!”다. 대표단 귀환 직후인 1949년 6월 27일 북한에서는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이 결성되었다. 통일운동체의 조직화였다. 북한은 이 조직을, “1946년 7월 22일에 조직된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을 일층 확대 강화하고 조국 통일의 위업을 전국적 범위에서 더욱 강력히 추진시키기 위하여 1949년 6월 27일에 남북 조선을 통한 71개의 애국적 민주 정당, 사회 단체 지도자들의 참가 하에 결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957년판 『대중 정치 용어 사전』, 264쪽. 1959년 증보판에서는 단체의 숫자가 72개다.

#### 4. 소련의 핵실험과 북한 핵 담론의 형성: ‘나쁜’ 핵무기와 ‘좋은’ 핵무기

##### 1) 소련의 핵실험과 한국전쟁: ‘핵무기 사용 금지’

1949년 8월 29일 소련은 카자흐스탄 사막지역에서 지상 폭발의 형태로 핵실험에 성공했다. 미국의 핵무기에 맞서는 소련의 세력 균형 정책이었다. 핵무기에 핵무기로 맞선 첫 사례였다. 소련의 핵실험이 있고 한 달이 지난 1949년 9월 28일 북한은 “쏘련에서의 「원자폭발사건」에 관한 따쓰의 공식보도”를 언급한 후, 9월 29일에는 ‘북조선직총’과 ‘북조선민청’ 중앙위원장의 명의로 미국과 영국이 소련의 핵실험에 당황하고 있고, 소련의 핵실험이 “인류행복에 기여한다”는 반향을 1면에 보도했다. 1949년 9월 30일에는 소련과 공산주의로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으로 숙청되는 박창옥이 ‘북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장’의 직함으로 “쏘련의 원자무기소유는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을 통해, 미국의 핵무기에는 반대하지만, 소련의 핵무기는 평화의 도구로 생각하는 북한의 마음체계를 읽을 수 있다. 소련의 핵무기도 미국의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무기일 수 있지만 국가 성격, 즉 국가의 성향에 따라 핵무기가 다르게 기능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 담론은 소련의 핵실험 이후 소련의 ‘좋은’ 핵무기 대 미국의 ‘나쁜’ 핵무기라는 이분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북·소관계가 우호적인 조건하에서 소련의 핵 보유가 북한에 대한 핵우산으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전쟁의 도발까지 논리를 연장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소련

의 핵 보유는 자신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안보의 물질·심리적 토대를 강화하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매력이자 공포인 핵 심리의 이중성은, 북한의 핵무기 담론에도 반영되었다. 소련의 스탈린(J. Stalin)은 한국전쟁의 와중인 1951년 10월 7일 핵무기 금지가 미국의 핵 독점을 해체할 때만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했고,<sup>35)</sup> 북한은 소련의 주장을 수용하여 핵무기 담론을 구성했다. 스탈린의 이 발언에 대한 “반향”이 1951년 10월 『로동신문』에 빈번히 등장하는 기사였다.<sup>36)</sup>

다른 한편, 소련의 핵실험이란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의 금지를 향한 북한판 평화운동은 계속되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1950년 3월 3일 “평화옹호 세계위원회 평화제의 호소문에 관하여”란 결정을 채택했다. 세계평화대회 상설위원회 호소문의 주요 내용은, “군비 및 병력을 축소하며 원자무기를 금지하며 강대국간의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sup>37)</sup> 1950년 3월 19일 세계평화대회 상설위원회는 “스톡홀름 호소문(Stockholm Appeal)”을 채택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네 가지’ 내용으로 간략하게 구성된 이 호소문의 앞의 둘은, 핵무기의 ‘무조건적 금지’와 핵무기의 ‘국제적 통제’였다. 그리고 핵무기를 먼저 사용한 정부를 전범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과

35) “<원자탄의 지지자들은 오직 자기들이 이미 결코 독점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에 라 야만 원자무기의 금지에 동의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쓰딸린> 『쁘라우다』지 기자의 질문에 대한 쓰딸린 대원수의 대답,” 『로동신문』, 1951년 10월 7일.

36)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문두재’, ‘평화옹호위원회 위원장 한설야’, ‘조선민주청년동맹 김기수’ 등의 이름이 보인다.

37) 『조선중앙년감 1951~195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80쪽. 당시 『로동신문』 기사를 보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최경덕, 평화옹호 전국 민족위원회 대표 김익두, 대의원 리기영 등이 토론을 했다고 한다.

더불어 선의(善意)를 가진 인민들에게 서명을 호소하고 있었다.<sup>38)</sup>

핵무기의 무조건적 금지를 담고 있던 이 호소문에는 2년 동안 5억 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한다. 소련의 핵실험이 공개되면서 미국이 수소 폭탄 개발을 준비하던 시점이기도 했고,<sup>39)</sup> 따라서 대중의 핵 공포의 심리가 서명으로 폭발했다고 할 수 있다.<sup>40)</sup> 또한 핵무기 금지는 소련의 핵실험으로 미소 핵 복점체제가 성립되었지만 미국이 핵 우위에 있는 조건에서 소련에게 유리한 구호이기도 했다.<sup>41)</sup>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1952년에 간행된 글에서, 제국주의가 “폐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면서 당시 평화운동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sup>42)</sup>

- 
- 38) 이 호소문은 당시 의장이었던 핵물리학자인 프레데릭 졸리오-퀴리가 초안을 작성했다고 한다. 『로동신문』 1950년 3월 24일 자에는 “평화옹호세계위원회, 원자무기를 먼저 사용하는 정부는 범죄자로 인정될 것이다. 졸리오·퀴리의 연설”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프레데릭 졸리오-퀴리는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피에르 퀴리(P. Curie)와 마리 퀴리(M. Curie)의 사위다. 프레데릭 졸리오-퀴리는 부인인 이렌 졸리오-퀴리와 함께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이렌 졸리오-퀴리(I. J. Curie)도 프레데릭 졸리오-퀴리와 함께 평화운동에 참여했다. “졸리오-퀴리”는 1950년대 『로동신문』에서 “위대한 평화 투사”로 묘사된다.
- 39) 미국은 1952년 11월, 소련은 1953년 8월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영국은 1957년, 중국은 1967년, 프랑스는 1968년이다.
- 40) 소설가 토마스 만(T. Mann), 샹송가수 이브 몽땅(Y. Montand), 시인 파블로 네루다(P. Neruda), 화가 파블로 피카소(P. Picasso),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D. Shostakovich) 등의 이름이 보인다. 우파 정치인으로 1995년 프랑스의 대통령인 되는 자끄 시락(J. Chirac)도 서명했다.
- 41) 중국도 이 흐름에 동참했다. 중국에서의 ‘평화서명운동’은 중국의 국가 수립 이후 195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전국적 규모의 첫 번째 “선전운동”이었다. 이후 한국전쟁 발발 후 “항미원조운동”이 전개된다. 청카이(程凱), “평화염원과 정치동원,” 114~115, 125~152쪽. 미국의 핵 우위기는 상호확증파괴의 개념이 도입되는 1960년대 말까지다. 박건영, “핵무기와 국제정치,” 14~18쪽.
- 42) 스탈린(J. Stalin), “U.S.S.R.에서의 사회주의의 경제적 문제들,” 서준건 옮김, 『스탈린선집』, 제2권(서울: 전진, 1990), 224~225쪽.

오늘날의 평화운동의 목적은 인민 대중들이 평화의 보존과 또 다른 세계전쟁의 역제를 위해 투쟁하도록 일으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운동의 목표는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평화를 보존하는 민주주의적 목표에 한정된다.

만약 평화운동이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발전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오늘날의 평화운동이 아”니라는 것이 스탈린의 생각이었다. 소련 공산당이 설정한 이 한계는 역설적이지만 평화운동을 대중운동으로 만들었던 이론적 동력이었다.

북한에서는 직장, 학교, 지역 등의 단위에서 서명운동이 군중운동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특히 평화운동을 통일운동으로 번역하고 있던 북한의 마음체계에서 서명운동의 한반도적 맥락성은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sup>43)</sup> 한국전쟁 와중에도 이 서명운동은 계속되었다.<sup>44)</sup> 사실 한

---

43) 당시의 문건에서 평화운동을 통일운동으로 번역하는 마음체계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다. “평화적 조국통일을 촉진하는 평화옹호자대회의 결정서,” 『로동신문』, 1950년 2월 22일. “평화 옹호 세계위원회 평화제의 호소문에 관하여(1950년 3월 3일 채택된 결정)”에서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평화적 조국통일 방책에 대한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 찬동하며 그 실천을 위한 투쟁에 궤기한 애국적 전체 조선인민들을 격려한다”는 구절이 보인다. 『조선 중앙 년감 1951~195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44) 한국전쟁 와중에도 북한은 이른바 ‘해방지구’에서 스톡홀름 평화호소문에 대한 서명을 진행했다. 북한 자료에 따르면, 1950년 9월 16세 이상의 서명자가 1,331만 9,102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정용욱, “냉전의 평화, 분단의 평화,” 100쪽. 『조선중앙년감 1953』(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3)의 “국제회의의 및 기구” 편에는 세계평화대회 및 아시아-태평양 평화옹호대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실려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기간인 1952년에도 세계평화대회에 한설야를 대표로 파견했다. 『로동신문』, 1952년 5월 16일. 북한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옹호대회에도 적극 참여했다. 한국전쟁 와중인 1952년 5월 17일 『로동신문』에는 “아세아 및 태평양 구역 평화 옹호 대회 발기를 중국의 저명한 평화 투사들이 ‘호소’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옹호대회는 1952년

국전쟁의 발발은 국제적 수준의 서명운동을 촉진한 결정적 계기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따라서 서명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핵무기 선제 사용의 금지를 담고 있는 서명이 한국전쟁 기간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한 것은 아니겠지만, “‘한 묶음의 종잇조각’들이 완전하게 원자폭탄 투하의 실제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sup>45)</sup>

## 2) 냉전의 도래와 북한판 국제정치이론의 형성: 핵 담론의 기초

한국전쟁의 정전 이후, 동아시아에도 냉전이 도래했다. 미소가 대립하면서 1948~1949년 무장 갈등에 거의 근접했던 베를린 위기가 한국전쟁 이후 동아시아로 수입된 것이다. 한국전쟁 기간인 1951년 9월 미국과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국인 48개국은 일본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 대해 소련은 반대 의사를 밝혔고,<sup>46)</sup> 중국은 회의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 전쟁 중인 남북한도 이 회의에

---

10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중국의 북경에서 개최되었고, 10월 6일에는 한설야가 “공평하고 합리적 기초 위에서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데 관한” 보고를 했다. 이 대회에서는 ‘조선문제에 대한 결의문’, ‘5대강국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운동을 강화할 데 대한 결의문’ 등이 채택되었다. 북경 평화옹호대회의 진행 과정과 이 대회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정용욱, “냉전의 평화, 분단의 평화,” 101~109쪽 참조.

45) 청카이(程凱), “평화염원과 정치동원,” 120~125쪽.

46) 당시 소련 대표단의 수석이었던 그로미코(A. Gromyko)는, “이 조약은 합의를 본 연합국의 결과와 모순된다. 이것은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한 나라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며, 일본 군국주의가 재생할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어서, 전세계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안드레이 그로미코(A. Gromyko), 『그로미코 회고록』, 박형규 옮김(서울: 문학사상사, 1990).

참석하지 못했다. 한반도에서 열전(熱戰)을 거치는 와중에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인 냉전(冷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 조약의 핵심은, ‘미·일안보조약’을 통해 일본을 반공 진영에 편입하는 것이었다.<sup>47)</sup>

북한은 정전 이후 국제정치를 읽는 개념과 이론을 수입하게 된다. 두 개념, “랭전”과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이 『로동신문』 1953년 10월 21일과 1954년 10월 31일에 등장한다.<sup>48)</sup> 1955년 7월 13일 『로동신문』에는 “독자들의 질문에 의한 시사 용어 해설”로 “랭전”이 기사화 될 정도다. 북한의 냉전에 대한 생각의 일단을 보여주는 1955년 『근로자』의 글 가운데 일부다.<sup>49)</sup>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력사는 과거에 공동의 원수인 파시즘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동맹국들이었던 국가들 간의 관계의 악화로써 특징지어졌다. 서방 국가들의 많은 정객들은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이 불가능하며 소위 『랭전』이 불가피하여 『랭전』이 현 시대의 『운명』이라고까지 말하여 왔던 것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진영의 관계 악화가 북한이 이해하는 냉전의 핵심이다. 냉전은 평화적 공존이 아니라는 인식도 주목의 대상이다.<sup>50)</sup>

---

47) 마고사키 우케루(孫崎享),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일본의 사례, 1945~2012년』, 양기호 옮김(서울: 메디치, 2013). 평화조약은 샌프란시스코의 화려한 오페라하우스에서, 미·일안보조약은 샌프란시스코 외곽의 미국육군 기지 내에 있는 하사관클럽에서 체결되었다. 미·일안보조약이 ‘은밀한’ 마음체계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공간 배치다.

48) 두 기사의 제목은 “『랭전』 정책은 서부 베를린 주민들에게 무엇을 가져 왔는가”; “힘의 립장에 선 정책 지지자들의 파산”이다.

49) 허봉삼, “평화와 국제적 협조를 위하여,” 『근로자』, 8호(1955.8.25).

1959년 『대중 정치 용어 사전』에서는 냉전의 원인과 상태에 대한 정의가 있다.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침략적 제국주의자들이 실시한  
《힘의 립장에 선》 정책으로 인하여 조성된 국제 긴장 상태를 묘사하

- 50) 스탈린은 앞서 언급한 1952년 문건에서 당시의 평화운동을 평가하면서 제한적이지만 평화공존을 민주주의적 목표로 이론화한 바 있다. 1955년 『근로자』에서 언급되는 ‘평화공존’은 1956년 소련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흐루쇼프(N. Khrushchyov)가 스탈린에 대한 개인숭배 비판과 함께 발표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평화공존론보다 선행한 개념이다. 소련공산당 20차 당대회에 대해서는, 레오날드 샤피로(Leonard Schapir), 『소련공산당사』, 양홍모 옮김(서울: 문예출판사, 1977), 518~521쪽 참조. 이 대회에서는 스탈린의 1952년 문건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한다. 북한의 평화공존론의 뿌리는 1954년 6월 중국의 주은래(周恩來)와 인도의 네루(J. Nehru)가 인도의 델리에서 합의한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1956년 4월 “조선 노동당 제3차 대회 관계”에서는 평화공존 5원칙이 언급되고 있다. 1957년판 『대중 정치 용어 사전』, 317쪽은 평화공존 5원칙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상대방의 령토 완정과 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 (2) 호상 불가침, (3) 상대방 내정에 대한 불간섭, (4) 평등 및 호혜, (5) 평화적 공존인데 이것을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이라고 부른다. 그 후 이 원칙은 서로 다른 사회 제도를 가진 세계 모든 나라들 사이의 관계의 기초를 규정하는 기본 원칙으로 되었다. 1954년 10월 12일 북경에서 발표된 쑸, 중 량국 정부의 공동 선언은 쑸, 중 량국이 이 5개 원칙을 아세아와 태평양 지역 나라들 및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1955년 4월 아세아 및 아프리카의 29개 국가 대표들의 참가 하에 진행된 반등 회의(아세아, 아프리카 회의)는 평화적 공존 및 우호협조에 관한 10개 원칙을 선포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더불어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의 승리는 쑸이 시종 일관 견지하여 온 대외 정책의 기본 원칙인 평화적 공존에 관한 레닌적 총 로선의 역사적 승리를 말하여 준다”는 주장을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1964년판 『대중 정치 용어 사전』에는 중소가 이 원칙에 합의했다는 구절과 레닌적 노선의 승리 운운이 사라지게 된다. 2002년판 『국제법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에는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국제관계기본원칙”으로 이 “평화5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959년판 사전과 달리 『국제법사전』에는 “령토 완정”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연관된 ‘완정(完整)’이 빠져 있다. 영토와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만이 언급된다.

기 위하여 사용하는 말이다. 냉전이란 전쟁(열전)과 대비되는 말로서 정  
신상, 정치, 경제상으로 진행되는 적대적 활동을 말한다.<sup>51)</sup>

냉전의 발생을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국가들 탓으로 돌리는 당파  
성을 견지하고 있지만, 냉전이 심리적·정치경제적 차원의 적대적 상  
태임을 지적하고 있다. 냉전의 ‘감정(emotion)’은 역사적·정치적 차이  
에 뿌리를 두고 있고, 적대를 넘어 ‘혐오(hatred)’를 만들어내는 신화에  
기초한 것이었다.<sup>52)</sup> 북한은 냉전의 원인을 미국의 ‘힘의 정책’에서 찾  
고 있었다.<sup>53)</sup>

《힘의 립장에 선》 정책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  
는 《랭전》이 선포되고 군비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인공적으로 국가들  
간의 불신임이 고취되고 침략적 군사 빨럭인 나토, 세아토, 바그다드  
조약 등이 조작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힘의 정책의 요점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  
서 호상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평화적 회담의 방법으로 국  
제적 분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힘’을 내세우면  
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며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려는 데 있다”고 생각

---

51) 1959년판, 『대중 정치 용어 사전』, 111쪽. 1957년판에는 이 이론적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 “랭전 정책”(103쪽)이란 항목에서,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  
주의 국가들이 제2차 대전 종결 후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을 반대하는 새 전쟁을  
준비하며 국제 긴장 상태를 첨예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침략적인 전장 도발 정책을 말한다”는 정도다.

52) P. Calvo-coressi, *World Politics since 1945*(London: Longman, 1991), p. 3.

53) 정철산, “미제의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의 전면적 파산,” 『근로자』, 3호(1958.  
3.1).

했다.<sup>54)</sup>

물론 소련은 핵실험을 했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힘의 균형을 객관적 법칙이라 생각했다. 힘에 힘으로 맞서는 정책의 정당화 논리였다. 그러나 주관적 요인을 담고 있는 외교 정책은 ‘인민’을 위한 제도인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한 우호적인 외적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 말한다. 세력 균형을 고려하는 외교 정책이 세력 균형의 한 요소라 말하지만, 자국의 의도는 미국과 달리 세력 균형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sup>55)</sup>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북한식 표현에 따르면 미국의 ‘힘의 정책’을 실천하게 한 이론적 기초인 국제관계 이론인 현실주의의 (realism)의 마음체계가 도덕적 진보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주의와 인간의 동기에서 권력과 안보의 우선성을 가정하는 것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sup>56)</sup>

북한도 소련처럼, “쏘련을 선두로 하는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의 존재와 광범한 평화 애호 인민들의 친선 단결은 어떠한 힘으로도 깨뜨릴 수 없으며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sup>57)</sup> 그러나 실제 소련의 핵 담론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담론에서 사회주의의 특성을 발견하기란 어렵다. 소련의 핵실험은 ‘마찬가지’ 힘의 정책이었고, 북

---

54) 1959년판 『대중 정치 용어 사전』, 315쪽.

55) I. D. Ovsyany et al., *A Study of Soviet Foreign Policy*, pp. 11~15; D. Tomashevsky, *Lenin's Ideas and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Moscow: Progress Publishers, 1974), pp. 64~103.

56) 현실주의의 마음체계는, R. Gilpin, “The Richness of the Tradition of Political Realism,” in R. Keohane(ed.), *Neorealism and Its Critic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57) 1959년판 『대중 정치 용어 사전』, 315쪽. 그러나 1964년판 『대중 정치 용어 사전』에는 소련 및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언급이 없이, ‘평화 애호 역량’만을 미국의 힘의 정책에 맞서는 세력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은 소련의 정당화 담론을 답습했다. 물론 평화운동 세력이 냉전 해소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담론은 지속되었다. 북한의 핵 담론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면, 이것도 부분적으로 소련이 만든 이론의 수입이기는 하지만, 평화운동을 통한 핵 체제의 종식, 바로 이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 3) 냉전시대 북한 핵무기 담론의 이중성

소련의 핵실험 이후 핵무기의 금지는, 핵실험 및 선제 사용의 금지로 옮겨 가고 있었다.<sup>58)</sup> 북한의 『조선중앙년감 1954~1955』의 “기타 국제 회의 관계 중요 문헌”에는 평화옹호운동의 상설 기구인 세계평화이사회(World Peace Council)의 1954년 5월 28일 “원자 무기 문제에 관한 결의문”이 실려 있다. 이 결의문에는, “가장 긴급한 조치”라는 명목하에 “원자 및 수소탄의 시험을 진행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종류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는 언급과 더불어 핵실험 및 선제 사용 금지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지면 “원자 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 리용”할 수 있는 “협력”의 길이 개척될 수 있다는 구절들이 있다. 1955년 2월 18일부터 북한의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 위원회는 세계평화이사회와 호소문의 실천을 위해 “원자 전쟁을 반대하는 서명”을 시작했고, 5월 15일까지 615만 명 이상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한다.<sup>59)</sup> 또한 1955년 8월 6일에는 평양시에서 “원자

---

58) “평화옹호세계위원회, 원자무기를 먼저 사용하는 정부는 범죄자로 인정될 것이다.” 줄리오-퀴리의 연설, 『로동신문』, 1950년 3월 24일.

59) 『로동신문』, 1955년 3월 17일자에는 “원자 무기 반대 서명 운동 계속 활발 (중국에서의 원자무기 사용 반대 서명 운동)”이란 기사도 볼 수 있다.

및 수소 무기 반대” 군중대회를 개최했다.<sup>60)</sup> 1956년 4월 14일에는 군비 축소와 원자무기 금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기사를 『로동신문』 1면에 실기도 했다.

물론 북한 핵무기 담론의 이중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1956년 5월의 미국의 핵실험은 “규탄”의 대상이었지만, 1956년 11월 소련의 핵실험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서술된다. 1957년 하반기에 있었던 대륙 간 탄도미사일의 완성과 인공위성 발사가 “위대한 쏘련”이 만들어낸 “세계사적 사건들”로 묘사될 정도다. 냉전시대에 소련이 미국을 압도할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평가일 터다.<sup>61)</sup> 즉 소련의 핵 능력 축적을 긍정하는 발언이다.

소련이 1957년 유엔에서 수소폭탄을 포함한 핵실험의 중지, 핵무기 생산 및 축적의 금지, 핵무기 사용의 거부 등을 다시금 의제화하자 북한은 이 3원칙에 동의했다.<sup>62)</sup> 소련은 1958년 1월 30만의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보도를 했고, 북한은 이 조치가 “국제적 긴장 상태를 완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sup>63)</sup> 1958년 3월 31일 소련이 핵실

---

60) 당시 핵무기 금지는 군축과 연계되어 있었다. 서동훈, “군비 축소와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 『근로자』, 제9호(1955.9.25)에서는 그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원자 및 수소 무기의 사용은 군비 축소에 관한 조치들의 실시가 시작될 때 동시에 금지된다. 이 규정은 안전 보장 리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침략을 반대하는 방위적 목적을 위하여서만 레외로 될 수 있다. 원자 및 수소 무기의 생산은 상용 군비가 합의된 수준의 50% 축소됨과 동시에 중지된다. 원자 및 수소 무기의 완전한 금지는 상용 군비와 병력이 합의된 수준의 75% 축소된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국가들의 군비로부터의 이러한 무기의 제거와 그의 파괴는 상용 군비의 합의된 수준의 나머지 25%가 축소됨과 동시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61) 정철산, “미제의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의 전면적 파산,” 100쪽.

62) 『로동신문』, 1957년 7월 11일.

63) “미국과 기타 서부 령강의 침략 계층에 의한 《랭전》과 군비 경쟁을 종식시키며 국제 정세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

협을 전면 중지하는 결정을 하자, 북한은 1958년 4월 10일 “내각 전원 회의” 이후 소련의 입장에 찬동하는 “정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의 일부다.<sup>64)</sup>

오늘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오직 소련, 미국, 영국 3개국뿐이라는 사실과 더욱 소련이 핵무기의 시험을 일방적으로 중지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종류의 무기 시험을 전면적으로 중지할 데 대한 국제적 합의를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도 4월 11일 “미제의 도발적 책동들은 조선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취지를 강조하며 소련의 결정을 지지하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로동신문』 1958년 4월 12일지는, 위원장 한설야, “직총 중앙 위원회 한 상두”, “평양 전기 공장 로동자 남 기흥”, “평양시 동구역 정책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 박 리용”, “인민 배우 최 승희”, “과학원 원장 백 남운”, “녀맹 중앙 위원회 김 영수”, “민청 중앙 위원회 김 기수”, “북조선 기독교도 련맹 중앙 위원회 강 량욱” 등의 지지발언을 실었다. 같은 날짜에는 중국의 주은래 총리가 북경 주재 외교 대표들의 모임에서 “중국 정부와 인민은 핵무기 시험

---

미국 침략 계층들의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은 오늘 세계 도처에서 참패를 거듭하고 있다.” 이 인용문은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하며 세계 평화를 유지 강화할 데 대한 소련 최고 쏘베트의 결정 및 소련 정부의 제안들과 관련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결정,” 『조선중앙년감 1959』(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9).

64) 『로동신문』, 1958년 4월 11일. 4월 11일 『로동신문』 사설의 제목은, “조선 인민은 핵 무기 시험의 전면적 중지를 강경히 요구한다”였다.

중지에 대한 소련의 결정을 열렬히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기사도 게재되어 있었다.<sup>65)</sup>

그러나 소련의 핵실험 일방 중단은 1958년 10월 2일 폐기되었다. 『로동신문』 1958년 10월 4일지는 “소련에서 핵 무기 시험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하여”라는 “따스의 성명”이 실려 있다. 소련의 논리는, “다른 나라들이 그 시험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소련 정부가 소련의 안전의 리익을 고려하여”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핵 무기 시험을 부득이 재개하”였지만, 핵실험을 “영원히 전면적으로 즉시 중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말로 이 성명은 끝을 맺고 있다.

1958년 10월 31일 핵실험 중지를 위한 미·영·소 회담이 진행되자 북한은 다시금 “핵 무기 시험을 영원히 종식시키라”는 구호를 다시 들고 나왔다.<sup>66)</sup> 1960년 초에 재개된 3자회담에서 소련은, “핵 폭발이라고 의심되는 현상들을 현지에서 조사하기 위한 시찰 소조들을 가장 간단한 규범에 립각하여 미리 합의된 매해의 할당 수의 범위 내에서 파견”하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한다. 『로동신문』은 미국이 “시찰 소조들의 수를 일방적으로 증가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계속해서, 소련이 핵실험의 금지를 위해 “불요 불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시찰 소조의 수와 시찰 횟수를 턱없이 증가시키려는 미국의 완고한 주장은 사실 시찰의 명목하에 상대국의 군사 기밀을 정탐하려는 것으로

---

65) 1958년 4월 16일 자 『로동신문』에는 “주 은래 총리 소련의 결정을 지지하여 호루쑈브 수상에게 서한”이란 기사도 보인다.

66) 『로동신문』, 1958년 11월 2일.

서 도저히 용허할 수 없는 것이었다.

즉, “제네바 3 령장 회의” 쟁점은 지하 핵실험이었다.

1961년 8월 31일 소련은 “핵 무기 시험 폭발을 진행할 데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핵실험 일방 중단을 다시금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성명이었고, 북한은 1961년 9월 1일 『로동신문』 2면에 소련 정부의 성명을 게재하고 1면에 소련의 결정을 지지하는 사설 “전쟁 광신자들의 머리는 식혀 주어야 한다”를 발표했다. 사설 하단에는 “전쟁 세력을 제어하며 전 세계 평화를 유지 공고히 하기 취한” 소련의 조치를 지지하는 “홍명회 동지 담화”가 게재되었다. 9월 2일에는 소련의 핵실험 재개를 “전쟁 광신자들의 침략 책동을 제어하며 세계 평화를 위한 단호한 조치”라고 평가한 “평화 옹호 전국 민족 위원회 한 설야 위원장의 담화”가 실렸다. 홍명회와 한설야 모두 북한을 대표하는 소설가였다. 9월 3일에는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어떠한 침공도 섬멸적 보복 타격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담화를 발표한 “조쏘 친선 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기영도 소설가다.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 담론은 제국주의 국가라는 성향에서 소련의 핵무기 정책의 변화는 정세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했다. 미국은 어떤 담론과 정책을 선택하든 악(惡)이었고, 소련은 핵 정책을 반복해도 사회주의국가라는 성향 때문에 선(善)이었다. 제국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라는 성향은 상수였고, 정세는 사회주의국가에게만 적용되는 변수였다. 그러나 북한만 이 마음체계를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다. 1961년 9월 2일자 『로동신문』에는 소련의 핵실험 재개가 “제국주의자들에게 대한 준엄한 경고”라는 제목하에 “전쟁 광신자들의 발열한 머리를 식혀 주는 해열제”이며 “전 세계에서 평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강력한 고무로 된다”는 중국 정부의 지지 성명이 실려 있다.<sup>67)</sup> 세계평화이사회 ‘조차’ 소련 정부의 핵실험 재개를 동서독의 “강화 조약 체결에 관한 소련의 제안에 전쟁 준비 강화로써 대답”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북한의 보도다.<sup>68)</sup>

소련의 핵실험 재개 결정은, 1961년 6월 미소 비엔나 정상회담 이후의 이른바 ‘베를린위기’와 연관되어 있었다. 동서로 분단되었던 베를린에서 동독 주민의 서베를린으로의 탈출이 증가하자 소련은 독일 통일을 봉쇄하기 위해 동서독과의 평화조약을 제안했다. 미국은 베를린을 자유 도시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련의 제안이 베를린에 대한 접근권의 차단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고, 결국 미소는 핵전쟁까지 운위하면서 대립했다. 1961년 8월 소련은 베를린에 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10월에는 미소의 전차가 베를린에서 맞서기까지 했다. 베를린에 장벽이 완성되고 미소의 대립이 완화되는 시점이 11월이었다. 소련의 핵실험 재개 결정과 북한과 중국의 지지 성명은 미소의 대립이 절정으로 치달으려는 9월에 나왔다. 1961년 9월 2일자 『로동신문』에는 평양 주재 동독 대사와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량 독일 국가와의 강화 조약을 체결하여 서부 베를린을 비군사화된 자유 도시로 전면시킴”려는 소련과 동독의 제안에 미국과 서독이 군사적으로 맞섰다

---

67)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은 제국주의에 의한 새 전쟁 준비의 엄중한 위협에 대하여 높은 경각심을 유지해야 하며 자기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단호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이후 북한과 중국은 각기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68) 소련의 핵실험 재개에 대한 세계평화이사회의 지지는 이 조직이 ‘절대평화주의(pacifism)’가 아니라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의 추구도 인정하는 평화주의(pacifism)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는 것이다.<sup>69)</sup>

#### 4) 미국의 핵무기와 북한의 핵 위협 담론

북한 핵 담론의 주요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인, ‘핵 위협 담론’은 ‘1958년경’부터 북한매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북한에 위협을 가하는 주체는 미국이었다. 미국이 1957년 한반도에서 무력증강을 금지한 정전협정 제13항 2목의 일방적 폐기를 선언하고 남한에 핵무기를 반입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sup>70)</sup> 북한은 1958년 2월 1일 개최된 “군사 정전 위원회 제80차 회의”에서 남한을 “원자 전쟁 기지로 전면시키려는” 미국 측에 “강경한 항의”를 제출했다.<sup>71)</sup> 그리고 1958년 2월 6일

---

69) 1961년 베를린위기 당시 서베를린 시장은 나중에 서독의 동방 정책을 주도했던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W. Brandt)였다. 평양주대 독일대사는 독일 사회민주당 우파가 군국주의자와 결탁하고 있으며, “서부 베를린 시장 브란트의 행동에 언급하여 그는 이 자가 가장 악명 높은 전쟁 고창자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70) 정전협정 13항 2목의 내용이다. “한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 기간에 파괴, 파손, 損耗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每次 반입에 관하여 군사 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되는 處理情況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갈 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며 감시한다.” 정전협정은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참조.

71) 『로동신문』, 1958년 2월 2일. “지난 1월 29일 《유엔군 사령부》는 원자 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280미리 원자포가 이미 남조선에 반입되었다는 것을 정식으로

“정부 성명”으로 “조선 인민은 미제 침략군의 철거를 견결히 요구한다”를 발표한 바 있다.<sup>72)</sup> 1959년 6월 “조선 평화 옹호 전국 대회”의 “호소문”에도 “그들은 남조선에 원자 무기를 도입하고 원자 무기 기지를 설치하였으며 남조선 주둔 미군 부대들을 원자 부대로 개편하였다”는 구절이 나온다.<sup>73)</sup>

1958년을 지나며 북한의 핵무기 금지라는 보편 담론이 미국이 북한에 가하는 핵 위협 담론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소련의 의제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핵무기 담론에서, 아시아지역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는 것과 핵실험의 중지를 강조했다. 1961년 베를린위기 당시 소련의 핵실험 재개를 지지하는 북한의 정부 성명에서도, “남조선에 원자 및 유도 무기를 비법적으로 반입하고 무력을 증강하여 조선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구절을 볼 수 있다.<sup>74)</sup>

당시 북한의 핵 위협 담론과 관련하여 주목의 대상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발명과 ‘평화시대’라는 개념이다. 북한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생각은 1952년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옹호대회에 참여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54년 11월에는 ‘국제스탈린상’ 수상자인 박정애를 단장으로 하여 “아세아 제국 회의”에 참가하

---

언명하였다. ... 1957년 6월 21일 미국측이 정전 협정 제13항 2목의 일방적 폐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유가 바로 서구라파로부터 극동에 걸친 미국의 원자 전쟁 준비 계획의 일환으로서 남조선을 미국의 원자 전쟁 기지로 전변시키는 데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것이다.”

72) 『로동신문』, 1958년 2월 6일. 미국이 1958년부터 주한미군 시설에 전술핵 전력을 배치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황일도, 『북한 군사전략의 DNA』(서울: 플래닛미디어, 2013), 69~70쪽 참조.

73)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조선 평화 옹호 전국 대회),” 『조선중앙년감 1960』(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0).

74) 『로동신문』, 1961년 9월 3일.

기도 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가하는 핵 위협을 상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이 평화지대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평화지대(zone of peace)는 안정적(stable) 평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북한은 소련의 글을 인용하며 “핵 및 로케트 무기가 없는 지역”을 평화지대로 규정한 바 있다.<sup>75)</sup> 1957년판 『대중 정치 용어 사전』에서는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와 안전과 인민들 간의 친선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1959년판에는 “평화지대의 확대와 평화역량의 강화가 제국주의를 물리치는 정신적, 물질적 능력”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다.<sup>76)</sup>

평화지대의 설립을 주장하던 북한은 1961년 7월 6일과 11일, 소련 및 중국과 동맹을 체결했다. 평화지대가 핵 위협에 대응하는 담론이었다면, 동맹은 핵 위협에 대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77)</sup> 『로동신문』은 북·소동맹을 “조선과 극동에서의 평화의 위력한 담보”로, 북중동맹을 “불패의 동맹, 평화와 안전의 강력한 지주”로 묘사하고 있다. 두 조약 모두 어느 일방이 군사적 공격을 당할 경우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었고, 특히 북·소조약 1조의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북한에 대한 소련의 핵우산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다.<sup>78)</sup> 1961년의 시점에서 중

75) “아세아는 핵 및 로케트 무기가 없는 평화 지대로 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1958년 3월 11일.

76) 이후 평화지대는 비핵지대(nuclear-free zone)와 동의어가 된다. 2002년 『국제법 사전』, 251쪽에서는 평화지대와 비핵지대는 같은 항목에 들어 있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소유 및 그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핵무기를 장비한 비행기, 함선의 령공 및 령해의 통과와 비행장, 항구의 사용이 금지되고 외국군사기지들과 군사시설들이 없는 지역.”

77) 두 조약 모두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78)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국은 핵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북중조약 2조의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보다 북·소조약의 구절이 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소련은 동맹조약 체결 이후 MIG-17과 MIG-22 등을 북한에 제공했고, 북한은 핵우산과 더불어 공군력 강화를 통해 스스로 느끼는 핵 위협에 대처할 수 있었다.

동맹의 체결을 통해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핵우산을 보장받았지만, 북·소관계가 악화되면서 핵 위협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1961년 말 소련이 알바니아의 개인숭배(personal cult)를 비판하고 1962년 11월 쿠바 미사일위기 때 미국의 봉쇄 정책에 소련이 타협을 하자, 북한은 정책 전환을 시도하게 된다. 북한은 소련의 타협을 굴복으로 해석하고 비판을 가하면서도,<sup>79)</sup> 소련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구했지만 거부를 당했고, 따라서 소련의 핵우산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느꼈을 수 있다.<sup>80)</sup>

북한의 선택은 경제와 국방의 동시적 발전을 추구하는 “병진로선”이었다. 북한판 역사 다시 쓰기의 한 표본인 ‘2006년판’ 『조선로동

(과주: 한울, 2006).

79) 1962년 11월 『로동신문』에는 반미(反美)·친(親)쿠바 기사들이 계속 실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11월 6일 “쿠바 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11월 8일 “쿠바 수상 피델 카스트로의 11월 1일 텔레비존 방송 연설(전문)”; 11월 17일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를 더욱 높이 들자”; 11월 30일 “영웅적 쿠바 인민은 필승 불패이다” 등을 참조. 쿠바 미사일위기에 대한 쿠바 정책 결정자들의 마음체계는, F. Castro, *Cold War: Warnings for a Unipolar World*(Melbourne: Ocean Press, 2003). 카스트로(F. Castro)는 자신들이 모스크바의 괴뢰가 아니었고,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운동에 대해 소련과 지속적인 불일치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쿠바 미사일위기에 대한 미국 정책 결정자들의 마음체계는, 셸던 M. 스텐(S. M. Stern), 『존 F. 케네디의 13일』, 박수민 옮김(과주: 모던타임스, 2013). 소련은 자신들의 평화적이면서 단호한 행동에 의해 위기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I. D. Ovsyany et al., *A Study of Soviet Foreign Policy*, p. 173.

80)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27~130쪽.

당력사』는 북한이 병진노선으로 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sup>81)</sup>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소련의 핵무기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은 구태여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실지 까리브해위기 때에는 사회주의국가의 존엄도 집어던지고 미제의 압력 앞에 로골적으로 굴복하는 데로 나아갔다.

소련이 북한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국방력을 강화했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1962년 12월 10~14일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의 의제 가운데 하나가,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였다. 그러나 당시의 보도에는 소련에 대한 노골적 비판 대신에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확고히 수호하며 이 통일을 약화시키려는 어떠한 행위와도 견결히 투쟁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는 표현 정도가 등장한다.<sup>82)</sup> 정책 결정자들의 실제 마음체계보다 온건한 어휘의 사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

8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319쪽. 1964년 출간된 『조선 로동당 력사 교재』에는 ‘병진노선’이 독립된 절로 기술되지 않고 있다. 1979년판 『조선로동당력사』에는 병진노선이 한 절로 등장하지만 “미제국주의”에 대한 비판만 있지 소련에 대한 비난은 없다. 1991년도 『조선로동당력사』에도 소련에 대한 비난은 없다. 소련의 붕괴 후 출간한 2004년 『조선로동당력사』에서부터 소련에 대한 비난이 등장한다.

82)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 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년감 1963』(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3).

## 5)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담론: 소련과의 핵 협력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는 1954년 6월 소련에서 가동되었다. 소련은 오브난스크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보고서를 1955년 9월 공개한 바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시작한 소련은 1956년 3월 26일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국가들과 “연합 원자 핵 연구소 설치에 관한 협정”에 조인했다.<sup>83)</sup> 이 연구소에는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동독, 중국, 북한, 몽골,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체코슬로바키아가 참여했다. 이 연구소 설립의 목적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본 협정에 조인한 나라 과학자들이 핵 물리학 분야에서 이론적 및 실험적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이 연구소의 건설 및 유지비로 0.05%를, 중국은 20%를, 소련은 17.25%를 부담했다. 중국의 부담률이 높다는 점도 주목된다.<sup>84)</sup> 소련의 깔리닌주 두브나(Dubna)에 있던 이 연구소에 파견된 북한의 과학기술자들이 초기 북한의 핵 기술 발전 과정에서 역할했던 것처럼 보인다.<sup>85)</sup>

북한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담론은, 1958년경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은 북한의 국가 수립 10주년을 기념하는 ‘과학전람회’에서 “핵물리학 분야의 간부를 양성하는” 문제를 언급했다고 한

---

83) 『조선중앙년감 1957』(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7). 이 협정에 서명한 북한 대표는 “화학 공업상 정 준택”이었다. 『로동신문』 보도의 제목은, “합동 핵 연구소 조직에 관한 협정 모스크바에서 조인”이었다. 1956년 4월 7일 『로동신문』에는 단장이었던 정준택의 귀환담이 실려 있다.

84) 이 연구소는 1964년을 결산하는 『조선중앙년감 1965』에서는 이전의 연감에서와 달리 국제기구의 하나로 소개되지 않는다. 이후 기술하는 1964년 중국의 핵실험과의 연관을 생각하게 한다.

85) 1961년 7월 7일 『로동신문』에는 “우리나라 과학자 김희인을 비롯한 과학자 집단에 1961년도 연합 원자핵 연구소 과학상을 수여”했다는 기사도 보인다.

다.<sup>86)</sup> 1961년 9월에 열린 4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원자력을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여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을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여러 부문들에 널리 적용하여야 할 것”이란 발언을 한 바 있다. “원자력공업의 자립적인 토대”를 만들 고자 한 것이다.<sup>87)</sup> 동맹의 체결을 통해 핵 위협에 대응하고 동시에 핵 기술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원자력공업을 육성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5. 중국의 핵실험과 북한 핵 담론의 전환: ‘핵 폐기를 위한 핵무기’

### 1) 중국 핵실험의 긍정

북·소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1963년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용건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화 인민공화국 주석인 류소기(劉少奇)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당시 소련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불편한’ 마음체계가 드러나 있다.

86) 윤명수, 『조선과학기술발전사(해방후편 1)』(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166쪽.

87)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윤명수, 『조선과학기술발전사』, 247쪽. 1961년 9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15주년 기념보고회에 참가한 교직원들과의 담화에서, 김일성은 “원자력과 태양광선을 리용하는 문제도 깊이 연구하고 이 부문 전문가들을 키우는데도 큰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일성, “교수 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김일성전집』, 제2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관련 구절들이다.<sup>88)</sup>

중화 인민 공화국은 평화적 공존에 관한 5개 원칙의 창시자로서 평화적 공존에 관한 5개 원칙과 반동 정신을 일관하게 견지하면서 친선적 선린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있어서 거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현 시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주되는 위험은 수정주의이다. ... 그들은 자신이 제국주의를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제국주의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쌍방은 지금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 존재하는 의견 상이가 반드시 내부적인 평등한 협상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정한다.

이 인용문에서 수정주의는 소련을 지칭한다. 북한과 중국은 소련의 대외 정책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소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소련이 미국의 제국주의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었다.

북한과 중국이 공유한 소련비판은 중국의 핵 개발에 대한 북한의 긍정으로 나타났다. 1963년 8월 5일 미국, 영국, 소련은 모스크바에서 ‘핵실험금지조약(Treaty of Banning Nuclear Weapons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지하 핵

---

88) “최용건 위원장과 류소기 주석의 공동 성명,” 『조선중앙년감 1964』(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4).

실험은 인정하는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이었다. 『로동신문』 8월 4일자에는 이 조약을 비판하는 사설, “미제의 핵 전쟁 도발 책동을 반대하며 핵 무기를 철폐하기 위하여 투쟁하자”가 실렸다.<sup>89)</sup> 이 사설에서 북한은 이 조약이 “핵 시험 금지를 핵 무기의 금지와 분리시키고 있으며 핵 시험 금지도, 지하 핵 시험은 제외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중국의 핵 개발을 언급한다.

핵무기의 전파 방지라는 허울 좋은 간판 밑에서 미제가 노리는 진짜 목적은 바로 중국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이 핵무기를 소유하는데 장애를 조성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약화시키려는 데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미국에 대한 비판이지만 소련에 대한 비판도 담고 있는 사설이다. 그리고 미·영·소가 주도하는 핵 확산 금지를 사회주의국가들의 핵 보유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사회주의국가의 핵 보유 및 사회주의국가로의 핵 확산을 긍정하는 발언이다. 중국의 핵 개발이 북한의 안보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도 담겨 있다. 중국이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는 핵우산을 북한은 생각했을 것이다.

1964년 10월 16일 중국은 핵실험을 했다. 10월 17일 『人民日報』에 핵실험을 알리는 성명서가 게재되었다. 북한의 10월 18일 『로동신문』은 “중국에서 첫 핵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이란 기사와 더불어

---

89) 북한은 1958년 2월 『로동신문』에서 “원자 및 수소 무기 시험의 조속한 중지 문제”를 위한 미·영·소의 “수뇌자 회의”를 개최하자는 소련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중국 정부의 성명을 전제했다. “중국에서 성과적으로 진행한 핵 시험은 국방력을 강화하여 조국을 보위함에 있어서 중국 인민이 달성한 커다란 승리이며 동시에 전 세계 평화를 수호함에 있어서 중국 인민이 이룩한 커다란 기여”라는 게 북한의 평가였다. 중국 정부의 성명은, 미국의 핵 위협 때문에 핵실험을 했고, 미·영·소의 부분적 핵실험금지 조약은 “기만”이며, 핵무기 보유가 “핵 열강의 핵 독점을 분쇄하고 핵 무기를 소멸하기 위해” 핵실험을 했다는 논리로 구성되어 있었다.<sup>90)</sup> 북한이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했을 때도 ‘같은’ 논리를 전개했다.<sup>91)</sup>

중국의 핵 억제력에 대한 북한의 긍정은, 당시 내각수상인 김일성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용건 명의로 축전을 보낸 것에서도 드러난다. 축전의 말미에 북한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 주위에 굳게 단

90) 중국 정부의 성명은 “우리는 인간이 핵무기를 만든 것 만큼 인간이 반드시 그것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로 끝을 맺고 있다. 『로동신문』, 1961년 11월 2일자에서는 중국의 류소기 주석의 핵무기에 관한 발언을 보도하고 있다. “자기의 대외 정책을 작성함에 있어서 중국 정부는 결코 자기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핵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핵 무기의 완전한 금지 및 완전한 파괴 문제를 토의할 세계 국가 수뇌자 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제안을 다시금 제기하였으며 이에 있어서 핵무기를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나라들이 첫 조치로서 우선 핵 무기를 사용하지 말 데 대한 의무를 질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 중국도 핵 사용의 금지를 핵 담론의 핵심으로 삼게 된다.

91) 2006년 10월 3일 핵실험을 예고했던 북한 외무성 성명의 일부다. “오늘 조선반도에서는 미국의 날로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과 극악한 제재압력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가의 최고리익과 안전히 엄중히 침해당하고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철폐를 추동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다.” 구갑우,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서울: 후마니타스, 2007), 283~285쪽.

결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조국을 보위하며”라는 표현을 담았다. 『로동신문』 10월 19일 사설에서는 “사회주의 중국이 핵무기를 소유하게 된 것은 자기의 방위와 평화를 고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부득이한”에 방점을 찍을 수 있지만, 북한의 핵 담론이 핵 보유 반대에서 사회주의국가의 핵 보유 인정, 즉 핵 확산 동의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사설이다. 1964년 10월 29일 김일성이 10월 17일 중국의 주은래가 보낸 서한에 대한 “회답 서한”인 “핵 무기의 완전한 금지와 완전한 파괴 문제를 토의할 세계 각국 수뇌자 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제의를 지지하여”에서도 중국의 핵 실험이 “자위적인 조치”라는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sup>92)</sup>

## 2) 중국의 억제력과 북한의 국방력

‘2012년 5월’ ‘불멸의 력사’ 총서로 발간된 소설 『운명』은 중국의 핵실험 보고를 접한 직후 김일성이 ‘비장하게’ 1962년 12월의 전원회의를 회상하는 장면이 있다.<sup>93)</sup> 전원회의 첫날 ‘기록영화’를 보는 장면

92) 『조선중앙년감 1965』(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5).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핵 무기의 완전한 금지와 완전한 파괴를 시종 일관 주장하여 왔으며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구절도 이 “회답 서한”에서 주목의 대상이다.

93) 정기중, 『운명』(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2). 총서 『불멸의 력사』는 북한이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설정한 1970년대에 제작되기 시작했다. 김일성의 “수령형상”이 주제인 이 총서의 첫 권은 1972년에 출간된 『1932』년이었다. 김일성 사망 후에도 총서는 계속 발간되고 있고, 『운명』은 그 가운데 하나다. 한 평가처럼, “‘총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문학 창작물이고 역사적 사실을 공식화한 텍스트이자, 북한의 정치, 역사, 이념, 문학예술 등의 정책과 제반 지침을 망라한 자료의 집적물이다.” 상허학회, 『총서 『불멸의 역사』와 북한문학』(서울: 깊은샘, 2008).

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쿠바에 대한 해상봉쇄를 결정하고 쿠바의 군 중들은 “조국이나, 죽음이나.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소련에서는 “호루쇼브”가 “쿠바에 전개했던 미싸일과 중폭격기들의 철수를 명령한다.” 호루쇼프의 말과 함께 “회오리치는 진마지들, 무릎우에까지 올라간 짧은 치마가 휘돌아가”게 소련 젊은이들이 “자즈곡”에 맞추어 춤을 추는 장면이 그 다음이다. 기록영화는 베트남의 호지명, 중국의 모택동의 연설을 보여준 다음, 한반도 동해로 들어오는 미국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등장하게 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북한 측 대표의 발언에 이어 열병광장의 북한군으로 기록영화는 끝을 맺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운명』은 전원회의의 발언들을 소개한다. 소설 속 김일성의 말이다.

병진이란 말을 문자 그대로 경제, 국방에 다 같이 힘을 넣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 경제건설보다 국방건설에 더 큰 힘을 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만 생각지 말고 다들 더 연구합시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본 다음 토의해봅시다.

2012년의 시점에서 1962년 전원회의가 선택한 병진노선이 사실상의 국방강화노선이었고, 병진노선이 ‘경제-국방의 딜레마’로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을 보여주는 묘사다. 그리고 회의 ‘다섯 째’ 날에 했다고 하는 김일성의 발언이다.

사실 경제국방병진노선이라는 것을 말로 하기는 그닥 힘들지 않습니

다. 만장일치로 손을 들어 찬성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것을 결심하면 우리 인민은 또 허리띠를 졸라매며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1962년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을 둘러싼 갈등을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병진노선의 딜레마가 그 원인이었음을 생각하게 한다.

『운명』의 전개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중국의 핵실험이 “부득이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한다. 이른바 “조성된 정세”가 중국이 핵보유를 하게끔 만들었다는 논리다. 사회주의국가라는 중국의 성향보다는 정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은 이 위기의 정세에서 ‘국방력’ 강화로, 중국은 ‘억제력’의 확보로 대응한 형국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자원과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1962년의 병진노선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북·소관계와 북중관계가 서로 상쇄하는 관계로 전환되면서 북한은 어느 한편에 편승하지 못하는 ‘등거리’ 외교전략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 할 수 있다.<sup>94)</sup> 따라서 이른바 자주 또는 주체라는 ‘반(反)

---

94) 문화대혁명 이전인 1965년 북·소관계는 개선되어 북한과 소련은 군사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에 홍위병은 김일성을 “살찐 수정주의”, “호루쇼프의 제자” 등으로 비난했고, 심지어 김일성이 군부 쿠데타로 축출되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비판은, 1966년 8월 12일 『로동신문』의 1면과 2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성을 옹호하자,” “자기 머리로 사고해야 한다,” “자기 힘을 믿어야 한다,”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적 긍지를 가져야 한다,” “자립적 민족경제는 자주성의 물질적 기초이다,” “자주성을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등이 사실과 기사의 제목들이다. 1967년 1월 25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국 홍위병들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그 내용은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각지의 홍위병 신문, 벽보 및 빠라들이 퍼뜨리고 있는 우리 나라에 대한 선전이 전혀 무근거한 날조이라는 것을 언명하고 우리나라 당, 정부, 인민 그리고 인민군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중상이 아닐 수 없는 그러한 허위선전이

대국주의적' 집합 심리를 구축하게 되었고, 결국 북한도 '인정'한 병진노선에 내재한 딜레마가 심화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김일성은 1970년 11월 조선로동당 제5차 당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sup>95)</sup>

우리의 국방력은 매우 크고 비싼 대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우리의 국방비 지출은 나라와 인구가 적는데 비해서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되었습니다. 만약 국방에 돌려진 부담의 한부분이라도 덜어 그것을 경제건설에 돌렸더라면 우리의 인민경제는 보다 발전하였을 것이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훨씬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세는 이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세 때문에 “조국보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국방력을 강화”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병진노선의 딜레마가 심화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는 정세에서 북한의 선택은 이른바 병진노선이었지만, 그 노선은 북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 6. 결론

북한 핵 담론의 원형은 1947~1964년의 기간에 배태되었다. 이 핵담론은, 핵무기 담론, 핵 위협 담론,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선중앙년감 1968』(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8)에 실려 있다.

95)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조선중앙년감 1971』(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1).

담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핵무기 담론은 북한의 국가 수립 초기 핵무기 금지에서 소련의 핵실험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핵무기 선제사용의 금지로 이동했다. 특히 1949년 소련의 핵실험 이후 북한은 소련의 ‘좋은’ 핵무기와 미국의 ‘나쁜’ 핵무기라는 이분법을 가지게 되었다. 이 핵무기 담론은 매력과 공포라는 핵 심리의 이중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북한 핵 담론의 마음체계는, 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성향으로부터 핵 위협 담론을 도출하고, 친구로 생각하는 소련의 성향으로부터 핵우산과 같은 핵 협력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북한은 소련의 핵 정책—예를 들어 핵실험 금지에서 핵실험의 재개—의 전환에 대해서는 정세의 변화를 그 원인으로 생각하곤 했다. 소련의 핵 능력 축적도 소련의 성향이 아니라 조성된 정세의 탓으로 그 원인을 돌리고자 했다. 소련의 핵무기가 자국의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기에 가능한 마음체계의 발로였다. 1950년대 중반부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심을 가져온 북한은 최초로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한 소련과의 협력을 통해 핵 기술을 전수받는 선택을 했다. 1961년 조선로동당 4차대회 이후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북한경제의 발전을 추동하는 담론으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북·소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의 핵 담론에 변화가 발생했다. 1963년 미·영·소가 지하핵실험을 인정하는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합의했지만, 북한은 이 조약을 중국의 핵 개발을 가로막는 조치로 해석했다. 소련의 핵우산이 불확실해진 정세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자 친구인 중국의 핵실험을 긍정하게 된다. 핵실험 금지와 핵군축을 주장했던 북한이 핵 확산을 동의하는 마음체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핵 억제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없었던 북한은 이미 경제·국방병진노선의 길로 가고 있었다. 이 병진노선이 경제의

희생을 대가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임을 북한은 노선의 선택 초기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적과 적의 위협을 상정하는 핵 위협 담론에 포획된 북한의 마음체계가 작동한 불가피한 결과였다.

마지막으로, 북한 핵 담론에서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평화지대의 개념이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국가 수립 이후 적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두 세력으로, 사회주의 진영과 평화옹호 세력을 상정해왔다. 전자가 전형적인 세력 균형 정책을 통해 미국과 맞섰다면, 후자는 평화 세력의 연대를 통해 핵 과점체제에 도전하고자 했다. 평화지대화는 핵무기가 없는 지역의 창출, 즉 비핵지대화를 의미했다. 핵 능력이 충족되지 않은 조건하에서 평화지대는 북한의 마음체계에서 핵우산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도 있었다. 1980년 조선로동당 6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세력 균형으로는 평화와 안전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의 비핵지대화, 평화지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sup>96)</sup> 그리고 “세계 모든 지역에서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사용을 금지하며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sup>97)</sup> 그러나 결국 북한은 2005년 핵무기의 보유를 선언했고 더불어 핵 폐기를 주장하는, 즉 마음체계의 모순과 역설을 표현하는, 핵 담론을 개진하고 있다. 이 모순과 역설은 북한 핵 담론의 원형에서 그 싹을 확인할 수 있다.

■ 접수: 3월 2일 / 수정: 3월 25일 / 채택: 3월 31일

---

96) 2002년판 『국제법사전』, 251쪽에서는 북한이 1981년에 일본 사회당과 함께 동북아시아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설치하지는 제안을 했다는 구절도 나온다.

97)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국제법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근로자』.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김일성전집』.

김정일, 『주체문학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대중 정치 용어 사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대중 정치 용어 사전(증보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대중 정치 용어 사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로동신문』.

리재순, 『심리학개론』(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8).

『북한관계사료집』, 제37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윤명수, 『조선과학기술발전사(해방후편 1)』(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정기중, 『운명』(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2).

『조선 로동당 역사 교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략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_\_\_\_\_,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_\_\_\_\_, 『조선로동당략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4).

\_\_\_\_\_,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조선중앙년감』.

『인민』.

『천리마』.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구갑우, 『국제관계학 비판: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평화』(서울: 후마니타스, 2008).

\_\_\_\_\_,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서울: 후마니타스, 2007).

그로미코, 안드레이(A. Gromyko), 『그로미코 회고록』, 박형규 옮김(서울: 문학사상사, 1990).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과주: 문학동네, 2009).

마고사키 우케루(孫崎享),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일본의 사례, 1945~2012년』, 양기호 옮김(서울: 메디치, 2013).

비고츠키, 레프(Lev Semenovich Vygotsky), 『사고와 언언』, 이병훈·이재혁·허승철 옮김(과주: 한길사, 2013).

상허학회, 『총서 『불멸의 역사』와 북한문학』(서울: 깊은샘, 2008).

스턴, 쉘던(Stern, S. M.), 『존 F. 케네디의 13일』, 박수민 옮김(과주: 모던타임스, 2013).

신현정 외, 『마음학: 과학적 설명+철학적 성찰』(서울: 백산서당, 2010).

푸코, 미셸(M. Foucault), 『담론의 질서』, 이정우 옮김(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1998).

황일도, 『북한 군사전략의 DNA』(서울: 플래닛미디어, 2013).

### 2) 논문

구갑우, “북한의 핵억제담론의 심리학,” 『한반도 포커스』, 26호, 11·12월호 (2013).

\_\_\_\_\_, “정치에 전범을 제시한 어느 출판사의 편집 매뉴얼,” 『교수신문』, 2012년 5월 7일.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과주: 한울, 2006).

김세균·이상신, “권력의 DNA: 정치행태의 생리적 접근,” 『평화연구』, 제21권

2호(2013).

김정수, “북한의 감성체계 분석을 위한 방법론 모색,” 『2014년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도종윤, “국제정치학에서 주체 물음: 해석학적 접근을 위한 시론,” 『국제정치 논총』, 제53집 4호(2013).

박건영, “핵무기와 국제정치: 역사, 이론, 정책 그리고 미래,” 『핵의 국제정치』(서울: 경남대학교출판부, 2012).

스탈린(J. Stalin), “U.S.S.R.에서의 사회주의의 경제적 문제들,” 『스탈린선집』, 제2권, 서중건 옮김(서울: 전진, 1990).

은용수, “심리/인지적 연구와 국제관계학,” 『국제정치논총』, 제53집 4호(2013).

정성인, “북·러 관계,” 『북한의 대외관계』(파주: 한울, 2007).

정용욱, “냉전의 평화, 분단의 평화: 6·25전쟁 전후 북한의 평화운동에 나타난 평화론,” 『‘평화’의 역사, 역사 속의 평화』(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13년 11월 15일).

청카이(程凱), “평화염원과 정치동원: 1950년의 평화서명운동,”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서울: 문화과학사, 2013).

### 3. 국외 자료

#### 1) 단행본

Barash, D. and C. Webel, *Peace and Conflict Studies*(London: Sage, 2002).

Butler, G. and F. McManus, *Psychology: A Very Short Introduction*(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Calvocoressi, P., *World Politics since 1945*(London: Longman, 1991).

Campbell, D., *Writing Security: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2).

Castro, F., *Cold War: Warnings for a Unipolar World*(Melbourne: Ocean Press, 2003).

Krasner, S.(ed.), *International Regimes*(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Mercer, J., *Reputation & International Politics*(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 Morgan, P., *Deterrence Now*(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Ovsyany, I. D. et al., *A Study of Soviet Foreign Policy*(Moscow: Progress Publishers, 1975).
- Rogers, K., *Toward a Postpositivist World*(New York: Peter Lang, 1996).
- Snyder, G., *Deterrence and Defence*(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 Tomashevsky, D., *Lenin's Ideas and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Moscow: Progress Publishers, 1974).
- Waltz, K.,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Reading: Addison-Wesley, 1979).
- Wendt, A.,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Woodward, K., *Understanding Identity*(London: Arnold, 2002).

## 2) 논문

- Cole, P., "Atomic Bombast: Nuclear Weapon Decision-Making in Sweden, 1946-1972,"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0, No. 2(1997).
- George, A., "The Causal Nexus between Cognitive Beliefs and Decision-making Behavior: The 'Operational Code' Belief System," in L. Falkowski(ed.), *Psychological Models in International Politics*(Boulder: Westview Press, 1979).
- Gilpin, R., "The Richness of the Tradition of Political Realism," in R. Keohane(ed.), *Neorealism and Its Critic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 Jonter, T., "Swedish Plans to Acquire Nuclear Weapons, 1945-1968: An Analysis of the Technical Preparations," *Science and Global Security*, Vol. 18(2010).
- O'Reilly, K. P., "Leaders' Perceptions and Nuclear Proliferation: A Political Psychology Approach to Proliferation," *Political Psychology*, Vol. 33, No. 6 (2012).

## 3) 기타 자료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 A Prototype of Nuclear Discourse in North Korea, 1947~1964 : Reading the System of Mind

Koo, Kab Woo(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article explores a prototype of nuclear discourse in North Korea from the 1947-1964 period, during which North Korea had moved its stance from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o positive recognition of China's nuclear proliferation. The nuclear discourse was composed of prohibition, deterrence, threat and proliferation with regards to nuclear weapons, and also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is article describes the contradiction and paradox in the North Korean nuclear discourse and the psychological shift to the positive recognition of nuclear deterrence and proliferation during the period. Finally, the article aims to find out the system of mind embedded in the North Korean nuclear discourse in phases.

Keywords: North Korea, Soviet Union, United States, China, nuclear  
discourse, nuclear weapon, nuclear test, nuclear threat, system  
of mind